"5월 대동정신 퇴색…정치·운동 구분해야"

■정수만 5·18 유족회장 병상 인터뷰

'5·18 민중항쟁'의 산 증인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61) 회장이 '5월 광주'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5·18 제28주년 기념행사를 코앞에 두고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최근 광주지역엔 갖가지 억측이 나돌기도했다. 광주일보는 정 회장이 광주 모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확인, 지난 14일 인터뷰를 가졌다. "5월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자 정 회장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정 회장과의 일문일답.

5·18 광주시민들조차 관심없어

—최근 언론에 잠적설이 보도되고 있는데.

▲(뜻밖의 얘기에 놀란 듯) 잠적한 게 아니다. 지난 10일 지인 집에서 일을 보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5월 관련단체와 불미스러운 일 때문 아니냐는 주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몸이 아파서 입원한 것 뿐이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는데, 심해진 것 같다. 정확한 진단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5·18 기념행사에 참여는 할 수 있는가. 회장직을 그만둔다는 소문도 있는데.

▲참석 못 할 것 같다. 지난 27년 동안 기념식에서 경과보고를 맡아 했는데, 이번엔 5·18 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에게 위임했다. 추모제 시나리오도 넘겼다. 행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회장직은 예전부터 그만둘 생각이었다. 7월까지 맡은 뒤 그만 둘 계획이다. 명예스럽게 나가고 싶다.

—5월 행사가 점차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

▲(정 회장은 답변을 머뭇거렸다. 그러다 곤혹스런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기념행사는 5월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순수 민간단체에서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5월의 대동정신이 퇴색된다. 5월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격앙된 어조로) 우리가 80년 5월 당시 이해관계를 따지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거리로 나섰느냐.

—5월의 희망이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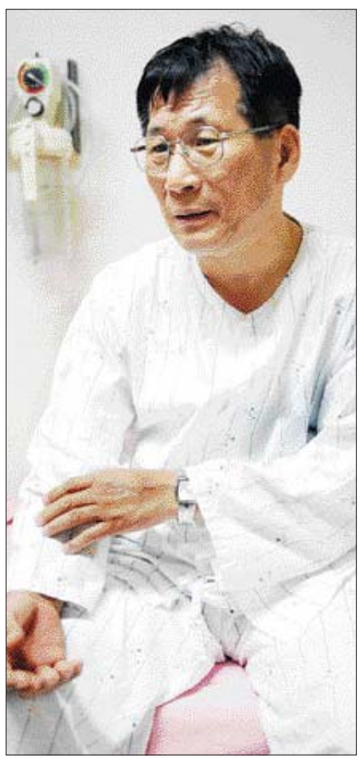
▲내가 감히 5월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간 자칫 나 혼자 5월을 이끌어 간 것처럼 비쳐 질 수 있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다만 개인적으론 희망이 없어 보인다. 국민들은 물론 광주 사람들도 도통 관심이 없다. 이권문제 때문에 단체간 마찰이 잦고 5월을 알리긴 보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며 미래의 5월을 짊어질 젊은 청년들은 더욱 관심 갖지 않는다.

7월 퇴임후 5·18 진실규명 주력

—회장직을 그만 둔 뒤 무슨 일을 할 생각인지.

▲지난 30여년 동안 5·18 관련 자료를 모아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왔다. 새 정부가 출범 후 5월 관련 행사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엔 5·18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

▲정수만 회장은=1980년 5월 23일 동생 정지영(당시 31세)씨가 계엄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자 5·18 알리기에 나섰다. 1981년 1주년 희생자 추도식에서 한 추도사의 내용이 문제돼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후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을 맡아 왔다.



광주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정수만 회장이 환자복을 입은 채 5·18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민주 '경선 룰' 신경전 고조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지명" VS "추첨으로 선출"

7월6일로 예정된 통합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룰을 놓고 당내 계파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전대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 선출 방식으로, 대의원 전원을 지역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자는 옛 열린우리당계와 이와 반대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구 민주당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전대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원기) 첫 회의를 갖고 대의원 선출 방식을 포함, '전대 룰'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밤 열린 당헌·당규분과위원회(위원장 유인태) 회의에서도 대의원 선출 부분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옛 열린우리당계는 지역위원장 지명 대 무작위 추첨 비율 마지노선을 7대3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 민주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유인태 위원장이 지역위원장 지명 방식을 적용하되 이번 전대에 한해 대의원 구성 비율을 옛 열린우리당계와 구 민주당계에 대해 7대3으로 배분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 민주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계파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이제 정통민주세력이 통합된 모습으로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전대 준비도 과거에 얽매였던 것을 털고 미래와 국민만을 보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기 위원장도 "과거에 어느 곳에 속해 있었느냐는 잊어야 한다. 당헌당규, 정강정책, 지도체제 문제 등을 결정함에 있어 자신이 속했던 세력과 집단의 이익을 초월,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이 국민 앞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투영될 수 있느냐, 오직 그 하나만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달말 당 대표 예비후보 등록 및 당원 명부 확정 작업을 완료한 뒤 6월 중순까지 대의원을 선출, 이후 공식 후보 등록, 후보자간 정책·방송 토론회 등을 거쳐 7월6일 전대에 임한다는 계획이나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이 늦어지면서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할 실정이다.

여기에 와병 중인 박홍수 사무총장의 '유고' 상황으로 인해 실무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박 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조직강화특위에서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키로 했지만 아직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도체제와 관련, 최고위원회의를 현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 지도부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 주자들 '5월 광주로'

추미애 15일, 정세균 17일, 정대철 18일 방문

통합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차기 주자들이 5월을 맞아 대거 광주를 찾는다.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을 매개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강한 야당의 '당권 주자'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면서 지지층과의 만남을 통해 전당대회를 앞둔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시동을 거는 셈이다.

여기에는 호남 표심의 향배가 전대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사진) 당선자는 15일 광주를 방문,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지지도 하락에 반사 이익을 바라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닌 강력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격적이면서도 후방의 허약함도 보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섬세함을 갖춘 전방위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당선자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4년간 지지세력에게 희망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미리 나서지 못하고 끌려만 가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쌓아나가 국민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 당선자는 오후에도 전남대 선거정치연구소 초청으로 사회과학대에서 '21세기 세계화시대 한국경제의 진로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당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했다.

정세균 의원도 오는 17일 통합민주당 당직자들과 광주를 방문,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18일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정 의원은 경선 룰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임시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 그동안 당내외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세 굳히기에 주력해 왔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23일 이후 광주를 비롯한 본격적인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 출마를 공식화한 정대철 고문도 15일 인천, 16일 대전·충남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정 고문은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17대 총선 낙천·낙선자를 포함, 다양한 인사를 접촉하고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민주당 지지기반을 확충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각오를 내비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 도전을 검토중인 개혁성향 중진 천정배 의원도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고, 역시 당권 도전 여부를 저울질 중인 정균환 최고위원도 17일 광주를 방문, 18일까지 이틀간 머물며 당원 및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 만남을 통해 당 진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윤리위 '있으나마나'

지난해 12월 설치 후 징계위 한번도 안 열려

로비 의혹 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도 침묵

광주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지향해야 할 품위유지와 청렴·검소의 의무 등을 명시한 광주시의원 윤리강령과 이를 위반한 의원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의장과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전체 의원 5분의 1 이상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돼 윤리위원회가 열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지난 4월 광주시의회 K 의원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을 때나 경찰이 지난 13일 광주지역 노인복지시설 허가 과정과 관련,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에도 침묵만 지키고 있다.

특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시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판적 의견이 많은데도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개적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 등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윤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시민들이 뽑은 것은 광주시정을 감시하고 집행부를 견제토록 한 시의원이지 로비스트가 아니다"면서 해당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또 시의원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로비 의혹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면서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